

브루나이

□ 국가 개황

일 반	위 면 기 인 수 민 언 종	치 : 보르네오 서북연안, 동부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에 의해 양분 적 : 6천 km ² (한반도의 1/40) 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구 : 38.8만 명(2008) 도 : Bandar Seri Begawan(3만 명) 족 : 말레이계, 중국계, 토속인종, 기타 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기타 토속어 교 : 회교
정 치	독 립 일 정 치 체 제 국 가 원 수 의 회 주 요 정 당 국 제 기 구 가 입	일 : 1984. 1. 1 (영국) 제 : 전제군주제 수 : Sultan Hassanal Bolkiah Muizzaddin 국왕 회 : 단원제(45석) 당 : NDP, PPKB, PAKAR 등 : UN, IMF, ADB, APEC, WTO 등
경 제	G D P 1 인 당 G D P 화 폐 단 위 회 계 연 도 산 업 구 조 주 요 수 출 품 주 요 수 입 품 주 요 부 존 자 원 경 제 적 강 점 경 제 적 약 점	: 136억 달러 (2008) : 35,509 달러(2008) : Brunei dollar (Br\$) : 4.1~3. 31 : (2007) 에너지산업 66.6% (석유 천연가스), 건설, 서비스, 농업 : (2007) 원유, 천연가스, 의류 : (2007) 기계류, 공산품, 식료품, 생필품 : 원유, 천연가스 : 에너지 자원 풍부 : 과도한 석유부문 의존, 노동력 부족

□ 주요기관의 평가등급

한국수출입은행	OECD	S&P	Moody's	Fitch
B1	2	-	-	-

1)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동향

□ 세습제로 국왕이 절대적 권력 행사

- 브루나이는 세습왕정정치체제로 현재 국왕은 제29대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며, 국왕이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 1998년 8월 10일 제1왕비 소생의 제1왕자인 Al-Muhtadee Billah를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왕정정치를 더욱 견고히 하였고, 왕세자의 결혼과 왕세자에게 대장계급을 부여함으로써 왕실 안정 및 왕세자의 정치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왕세자에게 경찰의 감찰 부총장 지위를 부여하여 권력 승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 국민단합 및 애국심 고취에 노력

- 국왕과 왕세자는 공공기관, 기업체 및 지방을 수시 방문하고, 격려 행사 등을 통해 공무원, 기업인, 지역 주민들과의 친근감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들로부터의 충성심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04년 2월 독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국민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 정체성 함양과 애국심을 국가 모토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상당기간 절대왕정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이슬람 기본교리에 입각한 생활철학 및 가치관 주입, 회교왕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 실시, 공무원, 군인 및 경찰을 통한 통치권 강화, 풍부한 석유 수입을 이용한 공공복지 혜택 시행 등을 통해 향후 상당기간 현 절대왕정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나) 사회동향

□ 회교왕정을 기반으로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

- 말레이 회교왕정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절대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브루나이는 종교교육 강화, 교리의 생활화 등 생활 전반에서 엄격한 종교적 생활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함.

□ 사회복지를 통한 국민의 잠재적 불만해소

-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왕일가의 부 독점, 국왕 우상화, 각료의 전횡, 비민주적 통치에 불만을 품은 소수 지식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1990년과 1992년에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각료의 전횡을 비난하는 문서를 유포하기도 하였음.
- 이에 브루나이는 전국민 의료보험, 연금제도, 정부주택제공, 무상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절대왕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인구의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인과 중국계로 구성

- 브루나이는 전체 인구의 약 66.7%가 말레이인, 약 15%가 중국계 브루나이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계 브루나이인들이 사실상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정부가 'Bumi Putra'¹⁾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국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1) 브루나이 정부는 다수의 말레이계(부미푸트라)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으며, 이는 타민족(중국계)의 경제적 실권 장악에 대한 견제 및 자국민 보호측면에서 제기되었음. 국왕은 브루나이 상권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앞으로 말레이계 국민들에게 상업을 지도하여 브루나이 전체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브루나이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말레이어를 배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2) 경제 현황

가) 국내경제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f
경제성장률	0.4	5.1	0.6	-0.5	..
재정수지 / GDP	18.2	20.6	26.2	29.6	..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2	0.3	2.7	..

자료 : IFS, EIU

□ 석유 · 가스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 브루나이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및 보유외환의 해외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2007년 4분기 전체 GDP의 70.1%, 2008년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임.
- 에너지자원 매장량이 향후 20-30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경제의 석유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비석유 가스 산업의 발전은 여전히 미미하며, 제조업의 경우 2005년 GDP의 약 1.8%만을 차지할 정도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한 편임.

□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 둔화세

- 브루나이 경제는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006년에 세계적 고유가의 영향으로 상품수지가 큰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도 5.1%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2008년에는 국제 유가 하락과 국가의 에너지 보존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도 둔화세를 보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브루나이는 오랜 기간 1.5% 이하의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해왔으나, 2008년 전세계적인 인플레이 현상으로 브루나이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7%까지 상승하였음. 2008년 8월 재화와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3%, 의류 제품은 4.7%, 식료품의 경우 1.2%까지 상승하였고 그 중에서도 인스턴트 면류의 경우 10.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 2009년 미 달러에 대한 브루나이 환율은 Br\$1.51:US\$1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브루나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2009년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폭은 2008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브루나이 장기발전 계획(2008-2035) 발표

- 브루나이의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다각화 및 민영기업 성장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브루나이 정부는 제7차 및 제8차 경제개발계획(2001-2005)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편임.
- 2008년에는 203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및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장기 국가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개 핵심 분야의 중기전략 정책을 수립하였음.

나) 대외 경제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e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4,038	5,232
경 상 수 지 / G D P	52.8	56.3
상 품 수 지	4,834	6,041	5,555
수 출	6,247	7,627	7,652
수 입	1,413	1,586	2,097
외 환 보 유 액	492	514	627

자료 : IFS, EIU

□ 경상수지 흑자 유지

- 브루나이는 2005년 40억 달러, 2006년 52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전반기에는 약 30억 브루나이 달러(약 2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8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 경기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하반기중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는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와 보유외환의 운영 수익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브루나이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일본, ASEAN, 한국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전체 GDP의 약 67%를 차지하는 석유·가스임. 비석유·가스 부문의 경우 그 규모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편이며, 비에너지 산업 부분 중 의류산업이 가장 큰 부분임.
- 브루나이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ASEAN, 일본 등이며 수입은 수출액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ASEAN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AFTA) 확대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수입품목은 운송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임.

□ 안정적인 보유외환 해외운용

- 브루나이는 국제투자시장의 주요 투자가로, 외환보유액 중 약 1/3이 1983년 설립된 브루나이 투자청(Brunei Investment Agency)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8개 외국기관에 의해 분할 관리되고 있음.
- 브루나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약 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투자의 약 80%가 정부 공채이고 나머지 20%가 현금, 주식, 금 및 부동산의 형태임.

다) 외채상환태도

주요 외채관련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총 외 채 잔 액	647	688	669
총외채잔액/GDP	6.8	6.0	5.4	4.9	..
D . S . R .	1.4	1.2	1.2	1.0	..

자료 : IFS, EIU

□ 대외지급능력 양호한 편

- 브루나이는 석유 수출국으로 주변국에 비해 외국자본 의존도가 낮으며,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가 적은 편임. 또한 D.S.R.이 1%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3) 주요 투자여건

가) 투자정책

□ 산업다각화 및 민간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브루나이 정부는 국내산업을 다각화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고자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이를 위해 비교적 탄력적이고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산업들을 발전이 미미한 산업, 성장 산업, 성숙 및 확대 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개방적인 투자정책

- 투자 우대법(세제상 혜택 및 우대조치에 대한 규정), 회사법(회사설립 가이드라인), 각종 면허법(라이선스 취득 가이드라인)등 투자 관련법이 있음.

- 투자 신청

- 정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적인 개발은 개업 허가를 취득하면 되고, 정부 시설과 보조를 필요로 하는 투자는 산업자원국(Ministry of Industry and Primary Resources: MIPR)에 신청해야 함.
- 브루나이의 투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산업자원국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구체적 투자 절차는 사전 계획 승인과 회사 제안 승인, 실제적 계획 승인, 실행 등의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절차는 산업자원국에서 이루어짐.

- 투자 분야

- 브루나이는 산업 분야를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산업분야에 대한 경영권, 인력, 시설이용, 정부지원에 대해 탄력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 식품 안전 관련 산업(Industries related to national food security)
 - 내수시장 지향 산업(Industries for local market)
 - 국내 자원 기반 산업(Industries based on local resources)
 - 수출 지향 산업(Industries for export market)
- 유망 투자분야로는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임업 및 관련제품 개발 및 제조, 어업 및 가공, 제조업 등이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산업은 제외됨.

- 투자규제

- 국가 식품 산업 및 국내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에 대해서만 브루나이 현지 인력 고용과 현지자본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국내 시장 및 수출 시장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소유 및 관리를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의 브루나이 내 지리적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이용은 자유로운 편이나, 환경 침해적 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음.

나) 외환제도

□ 싱가포르 달러와 1:1 환율 유지 정책

- 브루나이 통화환율위원회(BCMB)가 싱가포르 달러와의 환율이 1:1이 되도록 브루나이 달러 시장에 개입하거나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조세제도

□ 법인세

- 2008년 법인세율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가 2008년부터 기존 30%에서 27.5%로, 2009년부터는 25.5%로 인하되었으며, 금액에 대해서 차등 적용됨. 단, 석유 가스 탐사 및 생산에 따른 법인세는 55%가 부과됨.

- 과세대상

- 영업이익, 임차료, 로열티, 프리미엄, 브루나이에서 과세되지 않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취이자 할인료, 기타 재산소득
- 매출세, 지불급여세, 수출관세가 없으며, 개인기업, 파트너십 기업의 경우에도 법인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거주자의 개념

- 거주법인이란 브루나이 내에서 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으로, 외국국적 기업도 해당됨.

□ 기타 세금

- 기타 세금으로 인지세, 원천징수세, 수입세 등이 있으며, 개인소득세는 없음.

라) 금융제도

□ 금융 기관 및 역할

- 브루나이에는 중앙은행이 없으며 대신 경제부, 브루나이 통화환율위원회(BCMB), 금융 기관국(FID), 브루나이투자기관(BIA)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음. 영국(HSBC), 미국(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진출한 6개의 외국계 은행 지점이 있음.

□ 2008년, 자국 금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발표

- 2008년 10월, 브루나이 정부는 국제금융위기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예금을 보장해주는 법령을 공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브루나이 달러뿐만 아니라 외화 예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 이와 함께 정부는 자국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보상금 및 지불 자본금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규제도 발표하였음.

마) 노동제도

□ 민간 기업의 대부분에 외국인 노동자 종사

- 건설 노무자 및 정부, 민간 사업장의 현장 노무자는 대부분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고용된 단순 저임금 인력이 담당하고 있음. 공무원 중 전문직과 건설업 및 유통업 등의 종사 인력은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중국계가 사실상 대부분임.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브루나이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75,000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수치에는 약 22,000명으로 추산되는 운전기사, 개인 정원사 등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까지 합하면 약 100,0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브루나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는 관리자부터 단순노동자까지 가능하며, 외국인은

노동국으로부터 노동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출입국관리소는 노동허가조건에 따라 입국허가증을 발급함.

바) 무역제도

□ 브루나이-대외 국가간 조세협약(DTA,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²⁾ 체결 현황

- 브루나이 정부는 많은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체결국과의 교역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영국(1951), 인도네시아(2002), 중국(2006), 싱가포르(2006)와 이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과의 협정은 2009년 발효될 예정임.

□ 브루나이-대외국가 간 FTA 현황

- 브루나이는 ASEAN의 주요국가 중 한나라로 ASEAN의 역내 FTA인 AFTA 추진과 역외 국가들과의 활발한 FTA 협상 및 체결에 따라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음.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과 영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관세 철폐를 진행하고 있음. 그 외에도 ASEAN은 호주, 일본, 중국, 한국 등과 FTA를 체결함.

2)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